

코세페, 개막식 없이 진행… 지자체 축제는 대부분 취소

산업부 '국가애도기간' 행사 축소
오늘부터 보름간 예정대로 개최
참여 기업 2300여곳 '역대 최대'

유통·제조사, 소비심리 회복 위해
4~6일 전국적 '슈퍼위캔' 행사

국내 최대 규모 쇼핑행사인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예정대로 1일부터 보름간 진행된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 기간이 선포된 점을 감안해 명동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개막식과 지자체가 코세페와 연계하는 지역 축제는 대부분 취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쇼핑 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일~1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이태원 암사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 지정을 감안해 31일 예정된 코세페 개막식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코세페는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사은행사로 지자체와 정부 등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행사 개



이태원 참사 추모로 인해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개막식이 취소됐다. 31일 오전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식이 열릴 예정이던 서울 종구 명동예술극장 앞 거리에 흥보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뉴스

최 여부는 민간 자율로 정해진다.

코세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참여기업 수는 지난해(2155개사)를 뛰어 넘는 2300개사로 참여 기업수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형 유통·제조사들이 처음으로 함께 11월 4일~6일 동안

'슈퍼위캔(Super-WeCan)' 행사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생활·밥상 물가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소비 생활과 밀접한 이마트(쓱데이), 홈플러스(대한민국 플러스데이), 롯데마트(롯키데이), 농협하나로유통(금토일에 만나는 코리아 빅세

일) 등 주요 대형마트는 업체별 연중 대표 할인행사를 슈퍼위캔 기간에 개최해 신선·가공식품, 생필품 등 주력품목을 조특가로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 현대, 롯데, AK,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도 슈퍼위캔 기간에 맞춰 패션, 리빙 부문 등에 대한 기획행사와 함께 상품권 증정 등 사은행사를 진행하고, 가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오토캐리어가 TV와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제품을 최대 25~30% 할인 가격 판매에 나선다. 다만 할인행사 품목과 할인 비율 등은 각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행사 당일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 김장철에 대비 전국 2200여개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산지 직송 김장채소와 김장 용품 할인행사가 11월 10~12월 7일 열리고, 최대 10% 할인하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한우는 최대 3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한우 먹는 날'(11.1~11), '코리아수산 페스타'(10.31~11.16)도 코세페 기간 중 열린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지점 여건에 따

라 중소·소상공인이 지역 특산물과 의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생기획전을 진행하고, G마켓 등 7개 온라인 쇼핑몰과 현대백화점(판교) 등 6개 대형 유통사는 생활용품과 소형가전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드롭 마켓'을 개최한다.

한편, 서울 18개 자치구별 특화상품 판매전이나 인천e복 온라인쇼핑몰 할인행사 등 지자체가 코세페와 연계하는 지역 축제는 모두 취소된다. 다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업계 소규모 이벤트성 소비진작 행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전국 403개 전통시장과 800개 슈퍼마켓에서 열리는 할인행사나 장바구니 증정 이벤트 등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세페 추진위원회 사무국 이은철 팀장은 "코세페 행사가 민간이 자율로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라 기업 등에 따라 행사계획이 다르다"며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협조와 관련 준비해 온 내용은 모두 취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티빙, 시즌 흡수합병… 넷플릭스 이어 OTT 2위로 껑충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어 '승인'
합병 OTT, KT와 무관한 CJ 소속
점유율 18%… 구독료 인상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티빙의 시즌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넷플릭스에 이어 2위 OTT 사업자가 등장한다.

공정위는 31일 국내 OTT 사업자들인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OTT 시장에서 컨텐츠 중심 경쟁이 이뤄지는 가운데, 양질의 컨텐츠 수급과 제작역량을 확보해 구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 점유율>

사업자명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신고회사)	쿠팡플레이	디즈니+	시즌 (상대회사)
점유율(%)	38.22, 1위	14.37, 2위	13.07, 3위	11.80, 4위	5.61, 5위	4.98, 6위

* 모바일인덱스 산출 월별 점유율 산술평균 ('22.1. ~ '22.9.)

/자료=공정위

티빙은 기업집단 CJ 소속이고 시즌은 KT 소속인데, 이번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해 탄생하는 OTT는 CJ 소속이되며, KT와는 계열관계가 없어진다.

CJ에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본팩토리 등의 회사도 소속돼 있는데, 이들은 OTT와 방송사 등을 대상으로 각종 컨텐츠를 제작·납품 또는 방영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OTT 서비스 소비자가 부담해

야 할 구독료 인상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티빙(13.07%), 시즌(4.98%)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는 약 18.05% 수준에 불과, 양 사가 합병해도 1위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통합 티빙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은 웨이브(14.37%), 쿠팡플레이(11.80%), 디즈니+(5.61%) 등 기존 사업자를 앞서고 넷플릭스에 이어 2위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또 합병 OTT 계열사들이

컨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하거나, 합병 OTT가 자신의 계열사로부터만 컨텐츠를 배타적으로 공급받는 우려 역시 모두 가능성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CJ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만 컨텐츠를 공급의 경우 그에 따른 매출 포기 규모가 CJ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매출 액 중 약 3분의 2 수준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CJ 컨텐츠를 공급받지 못한 경쟁 OTT의 구독자들이 대거 합병 OTT로 이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분석 결과 그럴 가능성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원전해체연구소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해체연구소 착공 한수원, 2026년 준공 목표

한국수력원자력이 31일 고리와 새울원자력본부 인근에 위치한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 부지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착공식'을 진행했다.

행事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및 서남교 율산시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원전해체연구소 법인 임원진과 지역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 관련 공공기관의 출연과 정부, 지자체의 지원으로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수로 노형 해체 지원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소는 부산·울산 경계지역에, 중수로 노형 해체 지원을 위한 중수로해체기술원은 경북 경주에 설립할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춰 해체기술 개발과 장비 실증 등을 하게 된다. 모든 노형의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관련 생태계를 육성해 2050년까지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특별연장근로 180일까지 확대… 해외 건설업 '숨통'

고용부,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중동 모래폭풍·동남아 우기 등
현지 환경·기후 특수성 고려해”

해외로 파견된 건설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어 최대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중동의 모래폭풍이나 동남아시아 우기 등 현지 기후 사정으로 집중 근로가 필요한 건설업체들은 인력 활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

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목적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는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근로 기간이 확대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해외 건설공사의 현지 환경과 기후 등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

가 기간을 확대했다”며 “중동에서는 모래폭풍, 동남아의 우기, 몽골은 얼어붙은 땅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활용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1년에 90일,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정이 바뀌어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날부터 사업주는 실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 기간도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종료 후 1주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양 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건강 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